

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'21. 11. 10. (수) 09:30	배포일시	'21. 11. 10. (수) 09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장 류중재 (02-6050-2506)	담당자	이수호 사무관 (suholee90@korea.kr)
	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장 이창훈 (044-201-4152)		엄수연 사무관 (soi1734@korea.kr)

드론·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한걸음 모델 합의 도출

1. 추진 배경

-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(이하 「생활물류서비스법」)」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, 드론·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부재
 - 「생활물류서비스법」 제정('21.1.8.) 당시, 택시, 승용차, 승합차 등 포함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함에 따라 드론·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
- 김천시의 드론·로봇을 활용한 실증사업* 등 앞으로 드론·로봇 기반의 배송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래형 운송수단의 생활물류서비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필요
 - * 로봇·드론 배송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('21.5.20. 선정, [참고 1])
- 이에 대응하여 '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'를 '21년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('21.6.9. 경제중대본)

2. 상생조정기구 구성 및 주요 논의 경과

- 생활물류 이해관계자, 관계부처 등으로 상생조정기구*(중재자: 단국대 전형준 교수)를 구성, 5차례 전체 회의('21.7.30.~11.9.)를 실시하고, 관련 중립적전문가**와 1차례 회의('21.8.9.) 실시

* 이해관계자(전국용달협회, 통합물류협회, CJ대한통운, 메쉬코리아, 니나노컴퍼니),
관계부처(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),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(한국갈등학회)

** 드론·로봇(나르마, 유진로봇, 한국전자기술연구원), 법제화(한국법제연구원)

- ① 1차 회의(7.30.)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걸음 모델 및 상생조정기구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, 기구를 진행할 중립적 진행자 선정
- ② 중립적 전문가 회의(8.9.)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활용과 관련하여 드론·로봇의 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
- ③ 2차 회의(8.12.)에서는 상생조정기구 명칭을 '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'로 확정하고, 회의 운영 규칙 확정
- ④ 3차 회의(8.27.)에서는 산간 오지,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지역,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또는 시간대에서의 드론·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
- ⑤ 4차 회의(10.14.)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수단에 드론·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에 대해 논의
- ⑥ 5차 회의(11.9.)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해관계자 최종 합의 및 서명

3. 합의 결과 및 향후 계획

- 상생조정기구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합의 결과를 도출하여, [참고 2]와 같이 합의문 마련

- ① (제도화) 「생활물류서비스법」 적용대상 운송수단에 드론·로봇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 추진

② (상생안) 로봇 상·하차 분류, 드론 격·오지 배송 등 퍼스트·라스트 마일에서 기존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와 상호 보완 등 기존 생활물류서비스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·활용

③ (정부 지원) 기존 업계와의 상생,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*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 노력

* 내년에 처음 수립될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」(용역비 2억원 '22년 정부안 반영) 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등을 적극 뒷받침

□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'22년 초 「생활물류서비스법」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 시행

4. 합의 도출의 의의

□ 이번 과제는 실증사업 등을 비롯하여 앞으로 드론·로봇 배송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제도적 근거를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

○ 또한, 로봇을 통한 상·하차, 분류 등 활용, 드론을 통한 도서·산간 격·오지 배송 등 드론·로봇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

□ 앞으로도 혁신성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한걸음 모델을 통한 사회적 타협안 마련을 지속 추진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고 1

로봇·드론 배송 실증 사업 사례

[김천시: 로봇·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]

-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(국토부) 일환으로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, 공공건물·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
 - 드론 운용의 이점, 배달 동선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드론 서비스 대상지를 선정하고, 비도심 지역 드론 활용 물품 수송 실시
 - * (드론 활용 예시) 택배사 계약 등을 통해 특정 주소의 소화물 배송에 일부 사용
 - 김천시청,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실내 로봇을, 그린스마트 빌리지에서는 실외로봇을 활용하여 배달 및 택배 노동자 이동 시간 절감을 위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물류 배송
 - * (로봇 활용 예시) 이륜차가 문 앞까지 운송하면 실내에서는 로봇이 운송
 - 운송장비 도입·설치 등 배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중이며, '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증 추진 예정
-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,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 구축 예정
 - * (참여기관) 김천시, 경상북도, 한국도로공사,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, 영남대, SK플래닛, CJ대한통운, 메쉬코리아 등 12개 기관



참고 2

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 합의문

- 한걸음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상생조정기구(이하, “상생조정기구”)는 5차례(‘21.7.30.~11.9.) 전체회의, 1차례 중립적 전문가회의를 통해 드론과 로봇 등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의 필요성 및 제도화 방안,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
-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소비트렌드 가속화로 생활물류 산업의 급성장, 드론·로봇 기술의 발전 및 정부의 조기 상용화 계획(‘21.3.4.(목), 산업통상자원부)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드론·로봇 활용 가능성 및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, 제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
 - 현재의 드론·로봇의 상용화 기술 수준 등을 고려, 개인화물 등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·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에 합의
 -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 범위에 드론·로봇을 포함 하도록 개정
 -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정의에 드론, 로봇 운송수단을 삽입

□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생활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함

○ 이해관계자들은 로봇을 통한 상하차, 분류 등 활용, 드론을 통한 도서·산간 격·오지 배송 등 퍼스트·라스트 마일에서의 기존 운송수단과의 복합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업방안 모색

○ 정부는 기존 화물운송 업계와의 상생,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함

□ 정부는 상기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드론·로봇 실증사업 결과 및 상용화 시기 등을 감안하여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함

한걸음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상기의 내용에 합의함

2021. 11. 9. (화)